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특강·회의 개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사업 발굴·담당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도모

전북도는 15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을 위해 전북 지방소멸 대응 전문가 특강 및 소통 회의를 가졌다.

특강은 도와 시·군 지방소멸 대응 사업발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또한, 특강 후 기금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자율 논의도 이뤄졌다.

특강은 JTV 전주방송 정운성 논설위원이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 활성

화 전략'을 주제로 일본의 지역 창생 정책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강의했다.

정운성 논설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부가가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재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지자체는 단순 보조금 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잠재력을 끌어내 지역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특강과 회의로 공무원의 지방소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역량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본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전북



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마이스 산업 협업 시스템 강화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 개최... 숙박시설·서비스 업체 등 43개사 참여

전북도 마이스산업 협업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는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기전)과 함께 마이스 관련 산·관·학 협의체인 '전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를 15일 개최하고, 신규 회원 25개사를 위촉했다.

'전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18개 회원사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번에 새로 가입한 회원사는 MICE 서비스업체 13개사, 국제회의 기획 업체 10개사, 학계와 유관기관



각 1개소 등 총 25개 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11개 회원사가 가입해 업계 동향 분석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회의·

숙박시설, PCO(국제회의 기획업), 서비스 프로바이더(여행사, 쇼핑시설, 음식점 등),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다.

회의시간 정보교류와 공동마케팅을 통한 마이스 행사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정례회는 신규 회원사 소개와 위촉장 수여, '22년도 전북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사업설명, 행사장인왕의지밀 시설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추진할 국내 마이스 박람회 공동참가(아태마이스비즈니스페스티벌, 코리아마이스엑스포), 엠베서더(홍보대사) 위촉, 얼라이언스 홍보 가이드북 제작, 전북도 마이스워크 사업계획 등 각종 공모사업이나 유치 가능한 국내·외 행사, 마이스 업계 산업 전망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유호상 기자·정운성 기자

'찾아가는 사서원' 3주간 집중 진행

전북사회서비스원,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의견수렴 목적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도내 14개 시·군 사회서비스 주요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주간 집중 방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사서원'의 대상은 사회서비스 분야별 대표기관 및 단체장이며,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주시 4개소, 군산시 12개소, 익산시 15개소 등 도내 120여개의 사회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전북도민의 행복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현장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존중받는 사회서비스 현장이 되도록 일할 것이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본 사업의 취지와 포부를 말했다. /유호상 기자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 '1+등급' 획득

도 산림환경연구소, 에너지 절약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앞장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결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중 1+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0등급이 있으며, 연구소 청사 에너지 소요량은 160.3kWh/m²로, 1+등급인 140kWh/m² 이상 200kWh/m² 미만인 범주에 속한다.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 청사(연면적 5,466㎡)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난 2009년 준공했으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21.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내 조명설비를 절전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한편, 추후 창호 단열필름 부착공사를 통해 건축물 단열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유호상 기자

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 청사(연면적 5,466㎡)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난 2009년 준공했으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21.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한 에너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내 조명설비를 절전형 LED 등으로 교체하는 한편, 추후 창호 단열필름 부착공사를 통해 건축물 단열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유호상 기자

도,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

1년 미만 새내기 대상, 마음돌봄 심리상담 실시

전북도가 최근에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공직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내기 마음돌봄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MZ세대 신규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공직생활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2 새내기 마음돌봄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대상자는 1년 미만 신규임용자 및 임용 전 실무수습 직원 등 120여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10명 내외 소그룹별 집단상담 방식으로 약 2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상담사 주관으로, 개인별 성격유형검사(KMBTI)를 통한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아보고, 직장 내 상급자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슬기로운 대처방안 등을 제공한다.

또, 신규직원들끼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애로사항과 고민사항을 털어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집단상담이 종료되더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맞춤형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마음정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심리상담과 함께 소속 부서장 주관하에 주기적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고,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운영, 이들이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예정이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고 조직에 적응해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서 배려와 도움이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MZ세대 등 신규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과 더불어 개인 고충상담 등 다양한 마음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속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청사 2층에 마음지원실을 마련해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건강, 가족문제 등 다양한 고민상담이 가능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원거리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고창발전, 실현 가능 처방이 답"

김만균 민주당 환경보전특위 위원장, 고창군수 출마 선언

김만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환경보전특위 위원장이 15일 고창을 민주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고창군수 후보로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선 군수 시절부터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행정서비스는 이제 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행정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고창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군정을 펼치고자 군수라는 '직책'에 도전한다"고 결심표를 던졌다. 이어 "이른 나이에 무역화사를 청입해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 사막, 심지어 전쟁터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을 다녀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처하고,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경험과 연륜이 뿌리 깊은 관료사회에 오랜 폐습을 철폐하고 보여주지 시 전시 행정을 근절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부진한 예산 확보, 일 반산단 불법 입주계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먼저 꼽았다. 이는 현시점에서 고창군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매우 보편적인 현안들을 거듭 지적한 이유에 대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창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반복된 관리 차원의 '진단'보다는 경영 차원의 '처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언론매체를 통한 기고와 칼럼, 그리고 유튜브와 SNS 등에 분야별로 고창발전 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꾸준히 군민들에게 전하고 있다"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난' 해결 강력한 유동인구 유입책 시행, 체류형 관광사업의 토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고창의 청정한 자연과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고 그 주춧돌을 놓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만균 위원장은 고창초·중·고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환경보전특위 위원장 재대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등기 이사, 고창군 애환문동분부 부본부장, 고창초 총동창회장(취성산 무역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어슬렁어슬렁 전북여행 '길' 투어

14개 시·군 길테마 여행지 투어 스타트 생태자원 활용 이색 테마여행

전북도가 천천히 걸으면서 전북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는 어슬렁어슬렁 전북여행 '길' 투어를 시작한다.

도는 전북도 외에 거주하는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회 20명씩, 도내 14개 시·군 길테마여행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매달 '길' 투어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길' 투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이색 테마여행을 발굴,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여하고자 기획했다.

'어슬렁어슬렁 전북여행 '길' 투어' 대상지는 전북민의 생태·역사·문화가 승수는 '전북 천리길'과 연계한 8개의 테마길을 포함해 14개 시·군의 대표 '길'을 총망라하고 있다.

'전북 천리길' 코스는 군산 청암산로데길, 익산 미륵산로데길, 김제 새만금바람길, 진안 용담댐 감동바

롯길, 무주 구천동어사길, 장수 방화동생태길, 순창 장군목길, 고창 운곡습지생태길 등 총 8개의 테마 길이다.

그 외에 전주 전주천길, 정읍 솔타릿생태숲길, 남원 와운마을길, 완주 구이저수지 물레길, 임실 요산공원·봉어섬, 부안 직소폭포길 이 '길' 투어 테마길로 선정됐다.

어슬렁어슬렁 전북여행 '길' 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2개의 코스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3월 20일 완주 구이저수지 물레길(9.1km, 3시간 30분 소요)을 대상으로 첫 투어를 진행한다.

'길' 투어는 코스에 맞춘 플로깅(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북여행 '길' 여권 인증 횟수에 따라 등산바탕, 누룽지, 김부각, 숙박권, 승금 골드바(1g)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다문화가족 일자리 매칭 추진"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탄탄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금융대출 이자 보전과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15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모두가 누리는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보전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우선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자리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한 일자리 매칭사업을 활성화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전세 자금 등 금융대출 이자 보전까지 더해져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역시 경제 역량 강화의 핵심이다.

또 다문화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통해 언어 발달 교육, 이중 언어 지원,

심리 상담 강화 등을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 중 국내에서 발생한 젠더 폭력 피해자의 심리치유 및 체류 방안을 마련해 사회인정방을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문화 감수성 이해 교육, 문화 체험 다양화, 국제 교류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지역경쟁력을 끌어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해 이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누리는 전주, 완전히 새로운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대한방직 부지에 초고층 타워 건설'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대한방직 부지에 200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해 호남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우 출마예정자는 15일 "세계 10대 관광도시에 대형타워가 없는 곳이 없다"라며 전주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발방식과 관련 그는 '대한방직 부지의 종합경기장 두 곳을 분리해서 생 각하지 말고 종합적 시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대한 방직 부지의 경우 민간이 개발했다는데 전주시가 이를 막아할 이유는

없다"라고 행정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대한방직 부지 초 고층 타워는 전국적인 규모와 면모를 갖추고, 기존의 어떤 곳과도 차별화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그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사회, 문화발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도시상징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도 저도 아닌 규모로 만들어서 또다시 쓸모없이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이와 지을 거버넌트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돈 쓰고 싶고 불거리 많고 놀거리까지 갖춘 대규모 종합타워의 필요성을 재언급했다. /김윤성 기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청년 채용 증기에 월 100만원 2년간 지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민선 4·5기 완주군수)는 15일 청년보듬정책 4단으로 '청년취업 사회책임제'를 약속했다.

'청년취업 사회책임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떠난 청년들도 다시 돌아오는 전주를 만들어 2030이 살고 싶어하는 '청년특별시 전주'를 실현하겠다는 게 궁극의 목표다.

임 출마예정자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계약직이나 시

간제 등 비정규직이라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며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늘수록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출마예정자의 이번 청년취업 사회책임제는 지원액과 기간을 크게 늘려 지역의 청년과 기업체 모두에게 상생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릴 방침이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지방소멸위기 시대에는 청년 인재가 지방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성 기자